

코스피 2681.00 (+6.69)	코스닥 769.21 (+1.55)
금리 (한국은행) 2.989 (+0.036)	환율 (환율) 1338.25 (+2.25) (2일)



Economy



존재감 커진 中 LNG선 韓 친환경 초격차 고배

중국이 한국의 LNG 운반선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 불리며 LNG 운반선 분야에서 주요 경쟁력을 갖추어 왔으나, 최근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3559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규모의 선박 1234척이 발주됐다. 전년 발주가 2916만CGT·1302척인 것을 고려할 때 척수는 감소했으나 CGT 기준으로는 22.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7월(3877만CGT·

글로벌 초대형 선박 1234척 발주 中, 카타르서 LNG선 18척 계약 저렴한 인건비, 원가 경쟁력 갖춰

K조선, 암모니아·수소·전기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종 기술개발 박차

1513척)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811만CGT·176척을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별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전년동기(691만CGT·153척) 대비 척수와 CGT 모두 증가해 올해도 견조한 수주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국내 조선업체의 실적개선은 LNG선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HD한국조선해양(17척), 삼성중공업(15척), 한화오션(12)에 발주한 LNG선만 해도 총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LNG운반선은 초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선박으로 9개 국가 저도만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특히 적당 3000억원이 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어 조선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약 10년 전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7만 입방미터급 LNG-FSRU

만 해도 중국 조선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는 벌크선을 중심으로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수주했다.

기술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값 등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어 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LNG운반선 가격은 한국보다 5~7%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영조선공사(CSSC)는 카타르 에너지 공사로부터 LNG 운반선 18척을 수주했다. 국내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LNG운반선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셈이다.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LNG선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다만 지난 2021년 8척, 2022년 60척을 수주하며 기술 발전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중국의 LNG 건조 능력 확장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업체는 기술 보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내 조선사는 차세대 친환경 선종으로 암모니아·수소·전기추진선 등에 주목하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23년 5월 신설한 EP(친환경 추진)사업부를 중심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선급협회(ABS)와 협약을 맺고 대형 전기추진선 국제표준 정립에도 나선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연료전지 전문 회사 '블룸에너지'와 공동으로 연료전지 선박을 개발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추진 LNG 운반선에 대한 선급 기본승인을 획득했고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도 개발해 2022년 노르웨이 선급인 DNV로부터 기본설계 인증을 받았다.

한화오션 또한 선박의 주요 동력원으로 수소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ESS)을 장착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흥 R&D 캠퍼스에 전동화·육상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전기추진 선박 시스템에 대해 연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탄소포집, 암모니아, 수소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R&D 영역에 집중해야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처형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 대통령 불참

제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2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연설 없는 개원이자 최장 지각 기록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공공기관 재정 적신호... 4년후 부채 800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8년 35곳 부채 90조 더 늘여 부채비율 190%로 건전화 추진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 9000억원 증가한 1212조 4000억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 1000억원 늘어난 795조 1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어지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 8000억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 9000억원 늘어난 291조 4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60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상품 135개

치열한 ETF 경쟁에 '좀비' 상품 쌓인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자산운용사 간 경쟁 등으로 인해 ETF 신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저조한 '좀비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ETF가 순자산총액 50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거래량도 1000주 미만을 기록하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ETF는 60개로 작년말 49개 대비 22.44% 급증했다. 올해 ETF 시장은 150조원을 넘기는 등 규모가 불

어나면서 신규 상품이 쏟아지고, ETF 리브랜딩을 진행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품들도 다수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 상장된 ETF는 881개이며, 올해 들어서만 99개의 상품이 신규 상장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수가 845개사임을 감안했을 때, ETF 상품 수가 상장 기업 수보다 많은 셈이다.

유사한 ETF들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일 거래량 1000주 미만인 '좀비' 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약 135개(15.32%)의 E

TF 상품이 평균거래량(60일) 1000주를 넘기지 못했다. 이 중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인 ETF는 21개다.

거래소는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중 반기 말 기준 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품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ETF가 다음 반기 말에도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다만 ETF는 상장폐지 후 ETF가 편입돼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 현금화해 지급하기 때문에 금전적 타격은 덜한 편이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응급실 근무 의사, 평시 73%... 4일부터 군의관 배치 /사진 뉴시스
- ▲ 민주 "文 전 대통령 수사, 치졸한 정치 보복"

- ▲ '기밀유출' 정보사 7년간 외부감사 없었다
- ▲尹 대통령 "추석 의료특별대책 만전 기해달라"



- ▲ 추경호 "文 직접 수사 불가피... 수사 중단 없다" /사진 뉴시스
-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전 본격화... 강신만 등 출마